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실시 방안 연구



제 출 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실시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0

충남연구원장
전 희 경

목 차

I.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 추진체계	6
제3절 연구 내용 및 일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일정	8
3. 연구진 구성	8
제4절 기대 효과	9
II. 농촌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분석	11
제1절 농촌기본소득 개념	13
1. 정의	13
2. 개념	13
3. 원칙	14
4. 차이점	14
제2절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	16
1. 도농 격차 확대 및 농촌 인구 감소 심화	16
2. 농가소득 구조 악화	17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부작용	18
제3절 새정부 정책 기조 및 동향 분석	21
1. 이재명 대통령 농업공약	21
2.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21

제4절 국내외 사례 분석	27
1. 국내 사례1: 연천군 청산면(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7
2. 국내 사례2: 신안군 ‘햇빛연금’	28
3. 국외 사례: 인도 마디아(Madhya) 기본소득 실험	30
Ⅲ. 부여군 여건 분석 및 대상지 선정	31
제1절 읍면별 인구 현황	33
1. 부여군 인구 변화	33
2. 청년인구 변화	35
제2절 지역소멸 현황 분석	36
1. 지역소멸지수 측정 유형	36
2. 지역소멸 측정 결과	37
제3절 지역주민 인식 분석	39
1. 조사 개요	39
2. 조사 결과	40
Ⅳ.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정책모델 설계	47
제1절 대상 범위별 규모	49
제2절 지급 수준별 규모	50
제3절 지급특성 반영 사항	52
1.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응 논리	52
2. 부여군의 강한 의지	54
제4절 재정확보 방안	58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59
제1절 추진 전략 및 로드맵	61
1. 추진 전략	61
2. 로드맵	61
제2절 실행체계	62

참고문헌	64
------------	----

부록	65
----------	----

1.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 조사표	68
2.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68
3. 부여군 기본소득 조례안	75

표 목차

[표 1] 농어민수당, 농어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비교	15
[표 2]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신청 자격 지역)	24
[표 3]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기준	25
[표 4]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추진 체계(안)	26
[표 5] 응답자 성별	40
[표 6] 응답자 연령대	40
[표 7]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인식 수준	41
[표 8] 농촌주민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41
[표 9] 부여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	42
[표 10] 인구 감소 시 마을 소멸 가능성 인식 여부	42
[표 11]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한 태도	43
[표 12] 지급 찬성 이유(소득보전, 격차해소, 고향 유지 등)	43
[표 13] 적정 월 지급액 수준	44
[표 14] 선호하는 지급 형태(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44
[표 15] 중앙·도 지원이 없어도 부여군 자체 시행 필요성 동의 여부	45
[표 16] 15~20만원 지급 시 인구 변화 전망	45
[표 17] 부여군 인구 분포 현황	49
[표 18] 부여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액 산정(정부 시범사업 기준)	50
[표 19] 부여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액 산정(자체 사업)	51
[표 20] 부여군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 주요 내용	5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협력체계	6
[그림 2] 도농 간 소득 격차 현황	16
[그림 3] 충남도 내 농가인구 감소 현황	17
[그림 4]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변화 추세	17
[그림 5] 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 기관배치도)	18
[그림 6] 혁신도시 현황	18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	19
[그림 8]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현황	20
[그림 9] 충남지역 소멸위험지역 현황	20
[그림 10]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비전, 원칙, 5대 국정목표	21
[그림 11]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안내문	23
[그림 12]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및 성과	27
[그림 13]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인구변화 현황	28
[그림 14] 신안군 ‘햇빛연금’ 현황	28
[그림 15] 신안군 ‘햇빛연금’ 성과 현황	29
[그림 16] 인도 마디아(Madhya) 지역 농촌기본소득 실험 효과	30
[그림 17] 부여군 인구변화(2015-2025.08)	33
[그림 18] 충청남도 및 부여군 행정구역별 지역소멸지수	34
[그림 19] 부여군 총인구수 및 청년인구 10년 간 추이(2015-2024)	35
[그림 20] 마을소멸지수 계산 방식	36
[그림 21] 부여군 지역소멸지수 현황	37
[그림 22] 충남도 시군별 행정리 소멸지수 분석 결과	38
[그림 23] 충남도 및 부여군 행정리 소멸지수 분포 현황	38
[그림 24] 부여군 지역화폐 굿드래페이의 가맹점 규모별 사용 비중	53
[그림 25]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드래페이 홍보 현황	55
[그림 26]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추진 활동	56
[그림 27] 부여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문) 채택	56
[그림 28] 2024년 부여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58

I.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 내용 및 일정

제4절 기대 효과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실질적 인구 소멸 위기 직면

- 부여군은 고령화율과 인구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임
- 부여군 일부 행정리의 경우 최근 3년간 출생아 수가 0명이고, 인구 30명 이하의 고령마을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실질적인 ‘농촌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단순 귀농유도 정책으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한계

- 기존 정책은 귀농유도, 융자사업 등 개별 농가지원에 집중되어 왔으나, 마을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소득지원정책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 마을단위로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중심의 소멸대응 정책’을 설계하고, 정착 유도 및 참여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다층적 정책모형을 구축하여, 그 실행가능성과 정책 도입 방향을 도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부여군 1읍 15면

- 1읍: 부여읍
- 15면: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 시간적 범위

- 2026-2030년(5년간, 잠정)

■ 내용적 범위

- 부여군 실정에 적합한 마을단위 기본소득 정책모델의 설계 및 시범 도입 가능성 검토
- 소멸위기 마을의 인구 정착 기반 강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을 아우르는 정책구조 도출
- 기본소득의 세 가지 유형(보편형, 정착형, 참여형) 적용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시범운영 계획(안) 및 조례제정(안) 제시

2. 연구 방법

■ 정책분석

- 새정부 국정과제: 기본소득, 기본사회정책 등
- 지자체: 기본소득, 기본사회정책 등

■ 통계분석

- 부여군 인구변화: 인구 현황, 지역소멸도 분석 등
- 농가 인구, 소득 변화 등

■ 설문조사

- 대상: 군민 대상 설문조사: 80명
- 시기: 9월 29일(주민공청회 활용해 실시)

■ FGI조사

-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

■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사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등
- 해외 사례: 인도 농촌마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3. 연구 추진체계

■ 충남연구원

- 연구과제 총괄

■ 부여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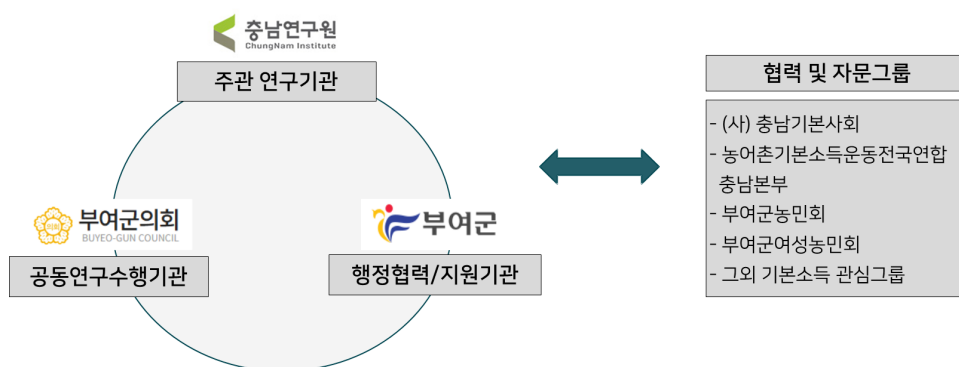
- 공동연구 수행: 보고회, 공청회 등

■ 부여군

- 행정협력: 행정자료 지원 등

■ 외부 협력그룹

- (사)기본사회 충남본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부여군농민회 등



[그림 1] 연구 협력체계

제3절 연구 내용 및 일정

1. 연구 내용

■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내용 및 일정
- 기대 효과

■ 농촌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분석

- 농촌기본소득 개념
-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
- 새 정부 정책 기조 및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부여군 여건 분석 및 대상지 선정

- 읍면별 인구 현황
- 소멸지수에 따른 지역소멸 현황 분석
- 지역주민 인식분석

■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정책모델 설계

- 대상범위별 규모
- 지급수준별 규모
- 지역특성 반영 사항
- 지역활성화 및 재정확보 방안

■ 결론 및 정책 제언

-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실행체계
- 추진 전략 및 로드맵

2. 연구 일정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세부내용 \ 기간	8월		9월		10월	
	D+15	D+30	D+45	D+60	D+75	D+90
가. 연구설계 및 착수						
나. 정책 추진여건 분석(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 활성화 방안 제시(의회, 행정, 전문가자문 등)						
라. 정책 제언						
마.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		○

3. 연구진 구성

구 성	소속/ 직 위	성 명	담당 분야
연구책임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박경철	연구총괄/ 실태조사, 기본구상, 추진전략, 실행방안 등
내부 연구진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김용현	국내외정책 동향, 추진전략 구상 등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한규리	자료정리, 연구지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목소리	연구지원

제4절 기대 효과

-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실행 방안의 기본 틀 제시
- 새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선도 및 근거자료 제시
- ‘농촌소멸’에 대응한 농촌기본소득 정책 도입 기반 조성

II. 농촌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분석

제1절 농촌기본소득 개념

제2절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

제3절 새정부 정책 기조 및 동향 분석

제4절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농촌기본소득 개념

1. 정의

■ 모든 농촌주민에게 소득수준,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

- 농촌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정의를 농촌에 적용한 것임
-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 개념

■ 모든 농촌주민에게 소득 유무, 노동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박경철, 2021)

- (사회보장 측면)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주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도농균형발전 측면) 농촌기본소득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발전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회생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주민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 및 증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3. 원칙

■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5원칙)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며 기본소득의 5원칙을 준용
 - 1) 보편성: 모든 농촌주민에게 지급
 - 2) 개별성: 농가가 아닌 농촌주민 개인에게 지급
 - 3) 무조건성: 노동, 소득 조건을 두지 않고 지급
 - 4) 정기성: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
 - 5) 현금성: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 단, 현금성 화폐인 상품권, 지역화폐도 포함

4. 차이점

■ 기본소득과 기존 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임.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임
-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임.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임
-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임.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임
-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임.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임
-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임

■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의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과 목적,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박경철, 2021)

- 농민수당의 핵심 목적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이며,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소멸 방지임
- 농민수당의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대표 1인이며,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민이며,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임

[표 1] 농어민수당, 농어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비교

구분	농어민수당	농어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핵심 목적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농어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농어촌 소멸 방지
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대표 1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모든 농어민	농어촌 거주 모든 주민
실행상 어려움	농어업경영체 쪼개기, 농어업인 개념 모호	정확한 농어업인 수 파악	농어촌 지역의 개념 모호
주요 현안	지급액 인상, 개별 지급	지급액 인상, 농어업인 인구 파악	농어촌 지역 기준 명확화
지급액(현재)	농가당 연간 60~80만원	농민 개인당 월 5만원(경기도)	주민 개인당 월 15만원(경기도)
지급방식	지역화폐(지류, 카드, 전자)	지역화폐(예정)	지역화폐(예정)
부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인의 자긍심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인의 자긍심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인구 유입, 도농불균형 해소

자료: 박경철(2021). 충청남도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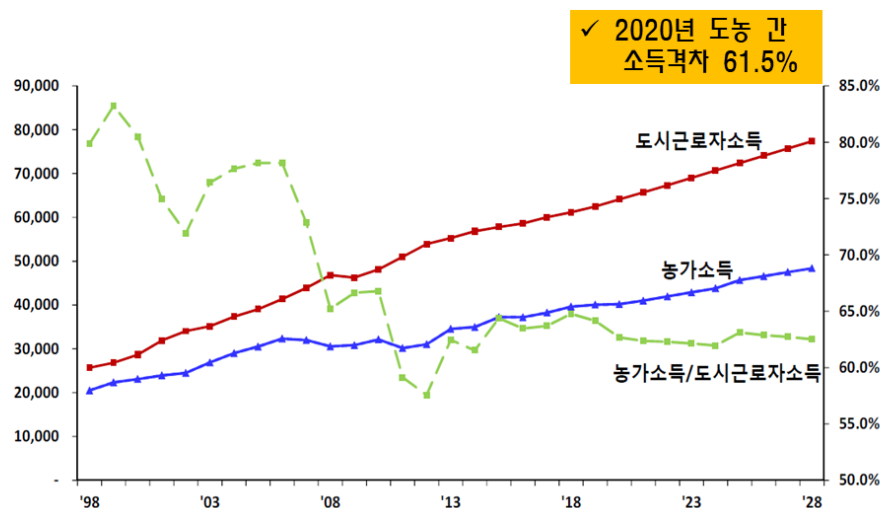
제2절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

1. 도농 격차 확대 및 농촌 인구 감소 심화

■ 도농 간 소득 격차 지속 확대

-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도시가구와 농가 간 소득 격차는 95% 정도였으나 이후 격차는 계속 확대됨
- 2020년 기준 도농 간 소득격차는 61.5%이며 이후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2024년에는 약 60%(추정)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개방 농정의 지속 확대로 농산물 가격 지속적 하락,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가경영비의 지속 상승,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의 피해 등임
- 특히 최근 기후재난은 심각한 상태임. 기후 재난이 거의 매해, 대규모 발생으로 농가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음

[그림 2] 도농 간 소득 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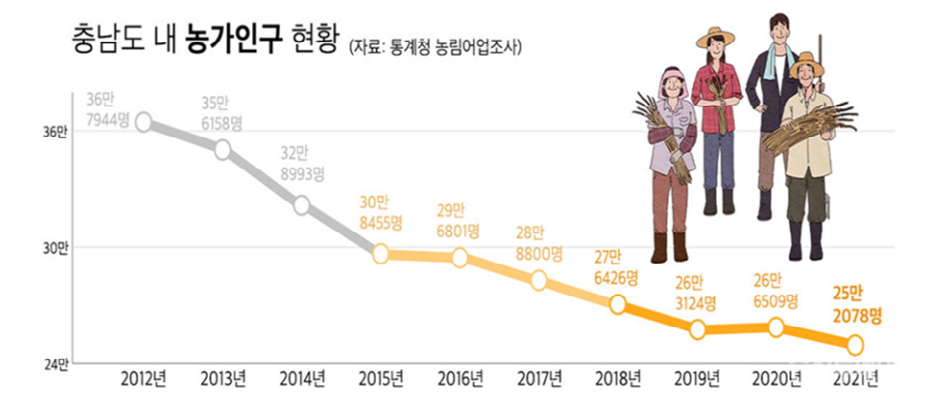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9

■ 농가 인구의 지속적 감소

- 1990년 농가인구는 약 424만 명, 농가수는 약 176.7만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농가인구 약 226만 명, 농가수는 약 112만 가구로 감소
- 2024년 기준 농가인구는 약 200.4만 명, 농가수는 약 97.4만 가구
- 충남도 농가인구도 2012년 36.8만 명에서 2021년 25.2만 명, 2024년 20.0만 명으로 계속 감소

[그림 3] 충남도 내 농가인구 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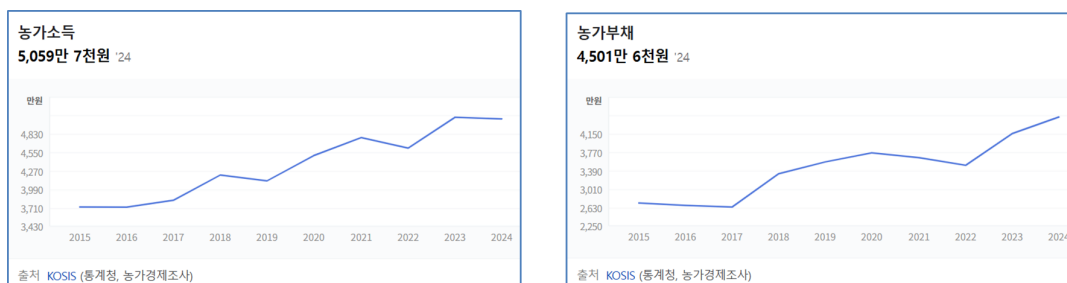
자료: 충남도 내 농가인구 현황 = 충청투데이그래픽팀

2. 농가소득 구조 악화

■ 농가소득보다 농가부채 증가 속도 빠름

- 농가의 경영 악화로 농가소득 증가보다는 농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그림 4]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변화 추세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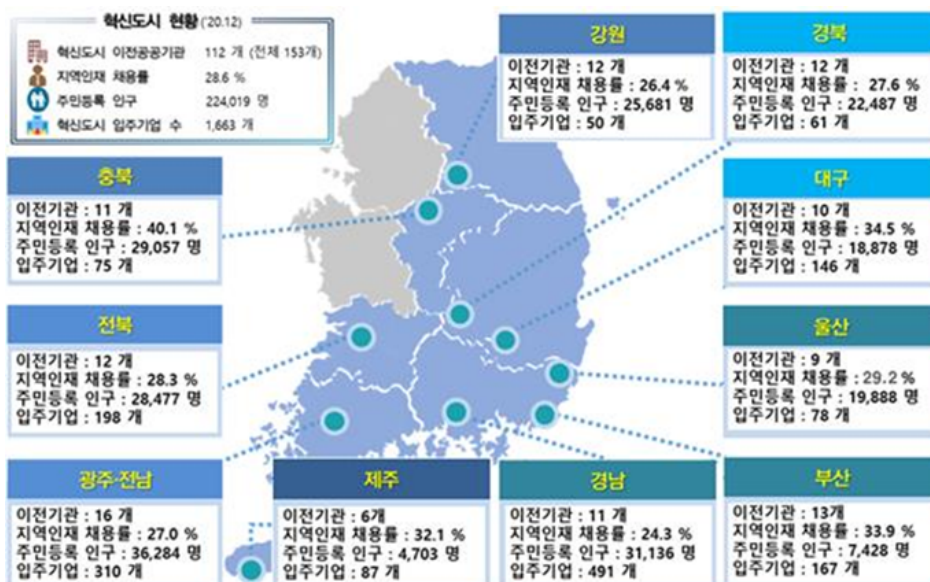
■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만성적인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그림 5] 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 기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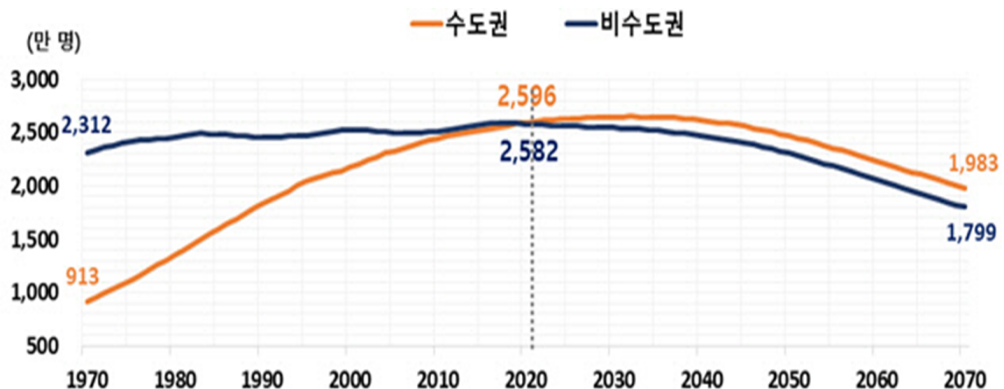
[그림 6] 혁신도시 현황



■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초과

-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초과(2020)하는 역효과를 초래
-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초과함.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격차는 확대 전망
- 이는 도시 개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에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즉,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10개의 혁신도시 건설되고 많은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했으나 수도권의 인구이주의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주변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도시와 농촌을 피폐화함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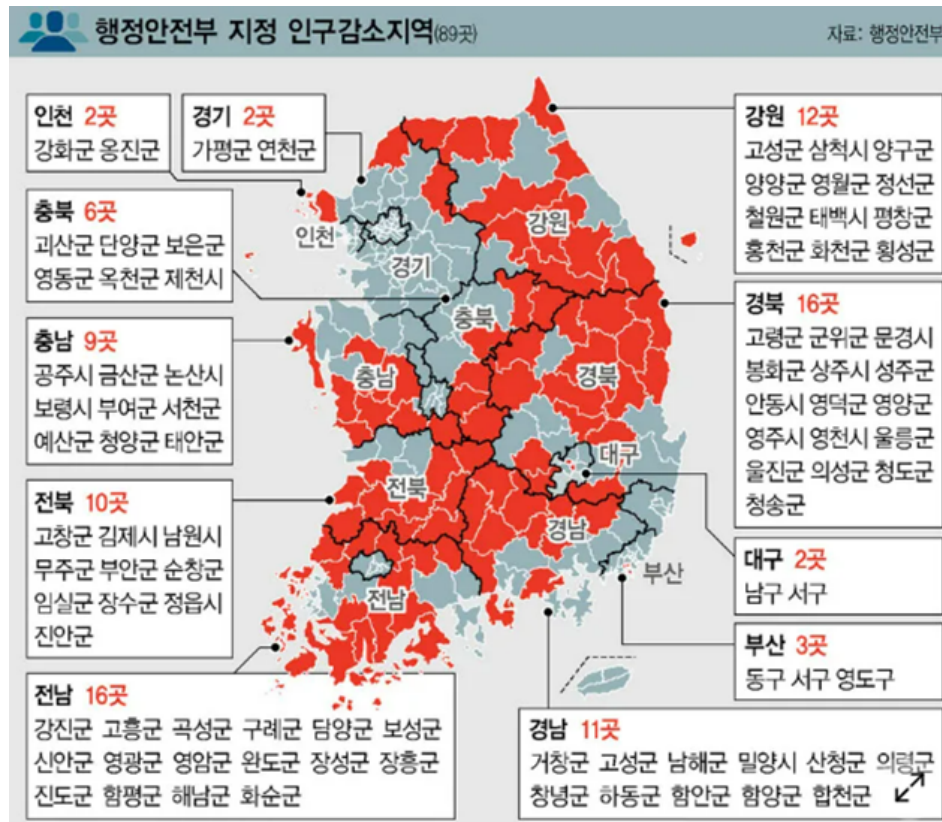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가속화

-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가 심각해지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발표
-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충남도는 9곳 지정: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위험지수(2018년)를 보면, 부여군은 0.23으로 서천군 0.21, 청양군 0.22 다음으로 충남 내 3위 차지

[그림 8]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현황



자료: 한겨레 2021. 10. 19

[그림 9] 충남지역 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 이론헌제 2019. 8. 15

제3절 새정부 정책 기조 및 동향 분석

1. 이재명 대통령 농업공약

■ 농업공약4: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및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확대

- 국토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기여 행위에 대한 주민수당 단계적 지급
-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농어촌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 지급
-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 국가균형발전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제고

2.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제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제시

[그림 10]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비전, 원칙, 5대 국정목표



■ 국정과제70: 농촌기본소득 도입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 주요내용

-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채류형 쉼터 도입, 농촌 채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18개소)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 ○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 기대효과

-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발표

- 농식품부,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고(2025.09)
-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역 중 6개 지역을 선정해 2년간(2026-7)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면 확대
- 주요 내용은 1개월 이상 거주 농촌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
- 이를 통해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실현

[그림 11]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안내문

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개시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합니다.

**2025.
9. 29. 월
~ 10. 13. 월**

신청 대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평가 방법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 사업대상지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기간	25.9.29.~10.13.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개요

- (사업대상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 89개 시군구 중 5개 구와 15개 시를 제외한 69개 군에 한정
- (사업 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사업 기간) '26~'27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단년만 추진 불가)
- (예산) 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준 '26~'27년간 시범사업
- 총 사업비 약 8,500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 *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 비율 조정 및 보조 확대 가능
- (사업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6개 군 내외로 선정
 - *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 360억 원 소요로 약 23.6만 명 지급 가능 규모

[표 2]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신청 자격 지역)

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郡 한정)
대구(1개)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0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5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7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0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0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개 시도 69개 군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기준

- 필수: 적격성
- 공통배점(80점): 소멸위험도(10), 추진여건(5), 실현가능성(45), 성과도출(20)
- 유형(20점): 일반형, 지역재원창출형
- 중점사항: 소멸위험도, 지역경제순환, 추가 재원투입(지자체의 의지)

[표 3]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 기준
필수	적격성	미충족 탈락	■ 사업 예비계획서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의 ■ 지역별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 동의
공통 배점 (80)	소멸 위험도 (10)	10	■ 인구감소지수(행안부)가 높아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역 ▷ 인구감소지수 환산값(100점 만점) × 0.1점
	추진 여건 (5)	5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현황('25년 기준) -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 사업장 대비 등록 비율 ▷ 가맹점 비율(%) × 0.05점(예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비율이 50%면 2.5점)
	실현 가능성 (45)	20	■ 시범사업('26~'27)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농식품부 시범사업 세부 운영 지침(안) 반영 충실성,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홍보 계획의 구체성 - 시범사업('26~'27)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추정했는지 여부 - 사업 전담 조직·인력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시범사업 추진 및 지속 운영을 위한 자체 조례 제정, 지역 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
		25	■ 시범사업('26~'27) 지방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예산 확보 계획(예: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발굴 등)과 본예산 편성 혹은 추경 시점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성과 도출 (20)	20	■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력 제고 계획('26~'27)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기본소득 연계 순환경제, 사회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수립한

				분야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 특정 지역.업종으로의 소비집중 방지 계획 및 소비 처 부족 지역의 소상공인 다양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유 형 별 배 점 (20)	일반형 (20)	지원 필요성 (20)	20	■ 최근 5년간 지역발전지수(R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 낮아 기본소득을 통한 활력 촉진이 필요한 지역 * 지역발전지수(RDI): 생활서비스.지역경제력.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부문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역발전지수 산정(KREI, 격년 조사) ▸ {100-(20년.22년.24년 지역발전지수(가중치 부여 총 합지수) 평균)} × 0.2점
	지역재 원창출 형 (20)	지역 재원 창출 (20)	20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환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26~27) -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등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공유화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 성 및 실현 가능성
가 점 (최대 10)		순환 경제 (최대 5)	최대 5	■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경제 체계 구축.운영 등 에서의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우수성(26~27) * 예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기본소득 소비로 지 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타 가맹점에서 재사용 시 캐 시백 혜택 부여 등
		적극성 (최대 5)	최대 5	■ 별도 추가 재원 투입 등을 통한 개인당 기본소득 추 가 지급 지역 - 지자체 차원의 추가 재원 투입 등을 통해 개인당 기 본소득 지급액을 월 15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등 지역의 적극성 ▸ (기본소득 월 지급액 - 15만원)/만원 × 1점

[표 4]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추진 체계(안)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평가위원회 운영 및 사업대 상지 선정, 자금 교부, 집행 점검 및 시범사업 효과 평가 등
시·도	상세 시행지침 보완,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지원, 집행 점검 등
군	공모 신청, 상품권 발행기관 사전 협약체결 및 물량 확보, 주민 설 명회 개최 등 홍보, 정산 및 환수 시행, 사후관리 대응 등
읍·면	전담 창구 운영, 근무자 배치·운영, 신청 접수, 자격 확인 및 지급대 상자 선정 읍·면 위원회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배부 등

제4절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사례1: 연천군 청산면(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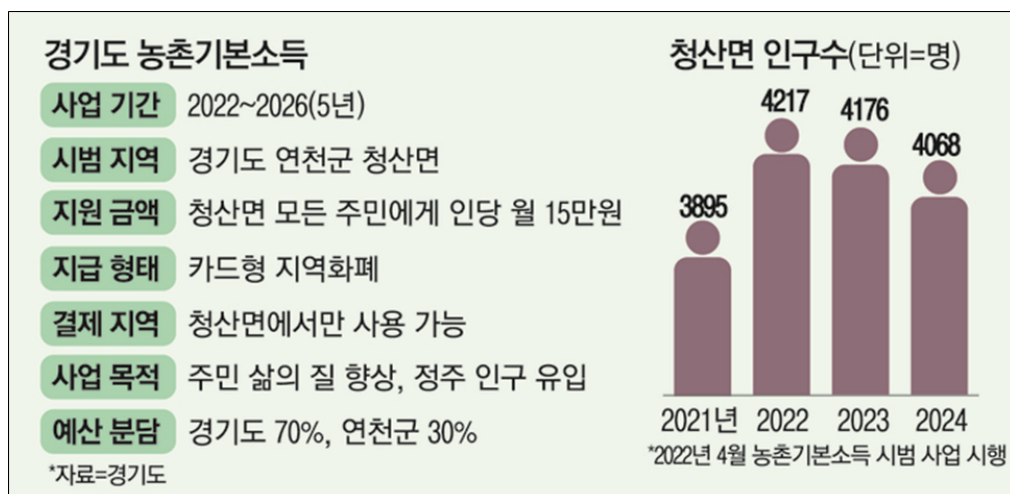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2026(5년)
- 대상: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체
- 지급액: 월 15만 원(농촌기본소득 수령자는 농민기본소득 수령 제외)
- 사업목적: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인구 유입
- 예산 부담: 경기도 70%, 연천군 30%

■ 사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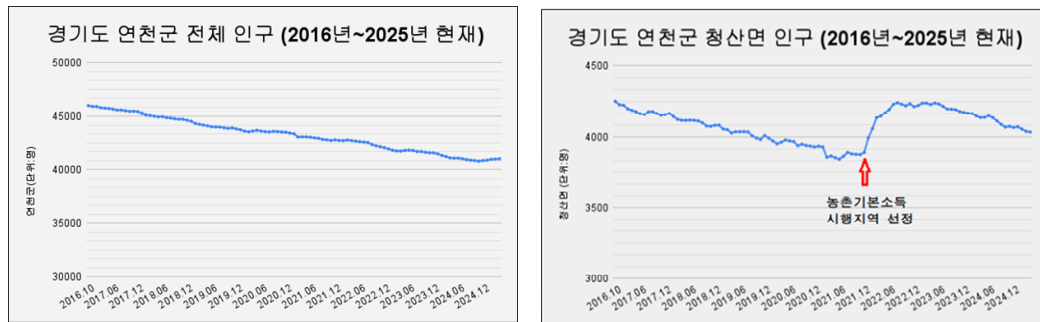
-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 4.4% 증가. 2022년 이후 감소한 이유는 주거부족,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등인 것으로 추정
- 동 기간 연천군 인구는 지속 감소를 감안하면 청산면의 인구감소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사업체 수는 2021년 대비 109개 증가

[그림 12]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및 성과



자료: 매일경제(2025.02.02.)

[그림 13]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인구변화 현황



자료: 뉴스타파 2025.05.16

2. 국내 사례2: 신안군 ‘햇빛연금’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한 소득 분배

-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처음 제정해 지역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된 전기 수익의 주민들에게 배당함
- 지급지역은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5곳임

[그림 14] 신안군 ‘햇빛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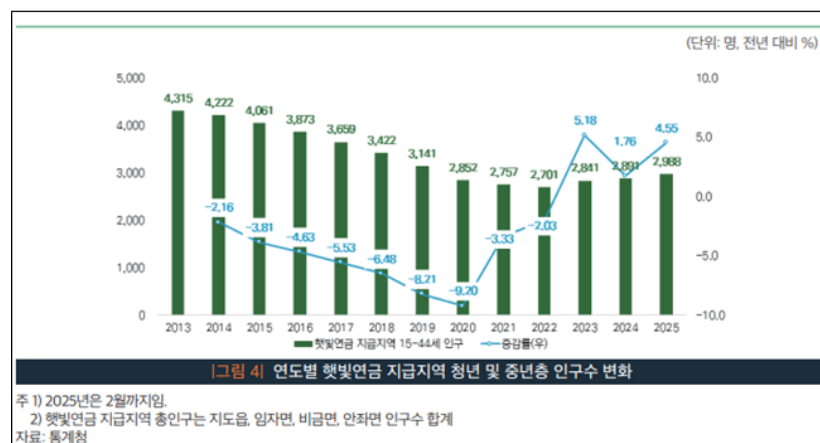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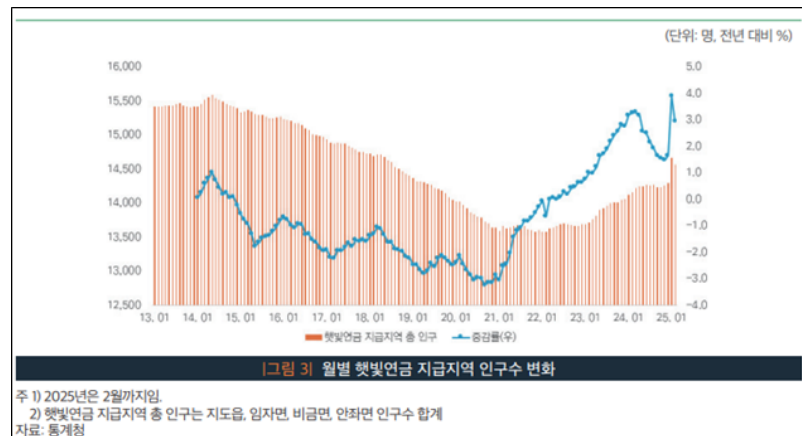


자료: 무등일보 2023.10.24

■ 사업 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공유는 2021년 17억 원, 2022년 36억 원, 2023년에는 100억 원이 넘어서며 가구당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이릅니다
- 신안군은 2023년 5월부터는 18세 이하 아동에게는 햇빛아동수당도 추가로 주기 시작함. 지급액은 첫해에는 1인당 40만 원, 이듬해는 80만 원, 2025년에는 120만 원으로 증가
-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햇빛연금’) 실시 이후 인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인구 증가가 뚜렷하게 증가
- 신안군에서 햇빛 연금의 혜택을 받는 주민은 2023년 기준 1만 6천 333명으로 전체 군민의 43%에 달함

[그림 15] 신안군 ‘햇빛연금’ 성과 현황



자료: 전남연구원 JNL이슈리포트, No.47, 2025.6.23.

3. 국외 사례: 인도 마디아(Madhya) 기본소득 실험

■ 사업 개요

- 영국 최고의 기본소득 이론가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 주도 실험(2010-2011)
- 가이 스탠딩 교수는 유니세프(UNICEF)의 후원을 받아 인도 마디아(Madhya) 지역 농촌마을을 대상(대상마을 9곳, 대조군 마을 12곳)으로 2010~11년(18개월)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 그 결과 기본소득을 실시한 마을주민은 주택과 위생시설, 영양상태와 식습관, 건강과 의료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영향, 교육, 경제활동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이 스탠딩 교수는 보통 원조사업의 경우 주민을 동원한 마을개발사업, 역량개발사업 등이 주를 이루지만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개선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기본소득 형태의 주민지원 사업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

[그림 16] 인도 마디아(Madhya) 지역 농촌기본소득 실험 효과



주: 우측 그림은 인도 마디아 지역 농촌기본소득 실험 성과보고서 표지임

Ⅲ. 부여군 여건 분석 및 대상지 선정

제1절 읍면별 인구 현황

제2절 지역소멸 현황 분석

제3절 지역주민 인식 분석

제1절 읍면별 인구 현황

1. 부여군 인구 변화

■ 인구의 지속 감소

- 지난 10년 동안(2015-2025.8) 부여군 인구는 지속 감소함
- 2015년 71,143명이었던 인구가 2025년 8월에는 58,712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7.5% 감소함

[그림 17] 부여군 인구변화(2015-202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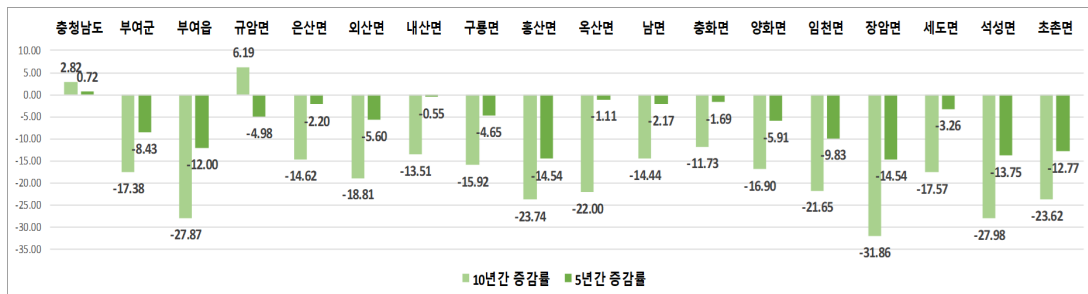
■ 부여군 전 지역에서 인구감소 진행

- 부여군 16개 읍면 인구는 최근 5년간 모두 감소하는 추세
- 규암면 인구는 지난 10년에 비해 증가하다 다시 감소 추세로 변함
- 이는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한 때 인구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장암면, 부여읍, 석성면 인구 감소 심각

- 지난 10년 동안(2015-2025.7) 읍면별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장암면이 -31.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부여읍 -27.9%, 석성면 -28.0%, 홍산면 -23.7%, 초촌면 -23.6%, 옥산면 -22.0% 등 순임. 반면 규암면은 6.2% 증가함
- 지난 5년 동안(2020-2025.7) 읍면별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홍산면과 장암면이 -14.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초촌면 -12.8%, 부여읍 -12.0%, 임천면 -9.8% 등으로 모든 읍면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부여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부여읍 인구도 최근 10년 동안 17.4%, 5년 동안 8.4%가 감소해 부여군 중심권의 주거와 상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8] 충청남도 및 부여군 행정구역별 지역소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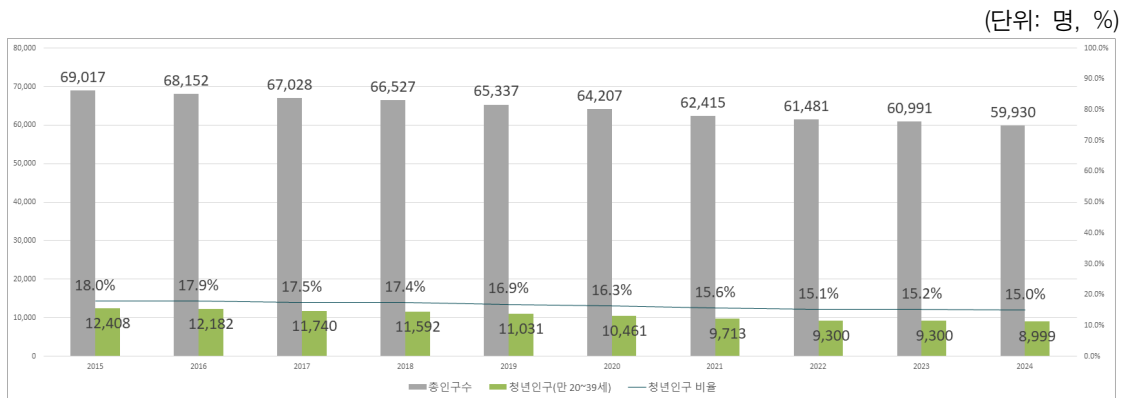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2025.07)

■ 청년 인구 비중도 지속 감소

- 부여군 청년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은 18.0%였으나 이후 2000년에는 16.3%, 2024년에는 15.0%로 감소함
-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역 내 재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9] 부여군 총인구수 및 청년인구 10년 간 추이(2015-202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

제2절 지역소멸 현황 분석

1. 지역소멸지수 측정 유형

■ 지역소멸 측정 유형

- 한계마을지표: 인구수 50명 이하, 고령화율 50% 이상
- 지역소멸지수: 만 20~39세 여성인구/만 65세 이상 인구
 - 장점: 측정 지표가 단순히 계산하기 수월
 - 단점: 과도한 단순화
- 마을소멸지수: 충남연구원 윤정미 박사 개발(2024)
 - $((20\sim44\text{세 여성 인구 수} + \text{전입인구 수})/70\text{세 이상 인구수}) \times \text{인구 가중치}$
 - 장점: 마을별(행정리) 측정 가능, 전입인구와 인구 가중치 부여로 지수에 대한 신뢰성 강화
 - 단점: 마을별 전입 인구수 파악이 어려움

[그림 20] 마을소멸지수 계산 방식

마을소멸지수		마을소멸지수 단계	
$\frac{20\sim44\text{세 여성 인구 수} + \text{전입인구 수}}{70\text{세 이상 인구 수}} \times \text{인구 가중치}$		구분	범례
① 70세 이상 인구 수 : 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② 20~44세 여성 인구 수 : 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③ 전입 인구 수 : 사회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④ 인구 가중치 : 마을소멸속도 조절, 마을 현 상태 진단 지표		소멸위기마을	지수
		마을소멸 고위기	0.2 미만
		마을소멸 위기	0.2~0.5
		마을소멸 전입	0.5~1.0
		마을소멸 보통	1.0~1.5
		마을소멸 낮음	1.5~2.0
		마을소멸 매우 낮음	2.0 이상

자료: 윤정미(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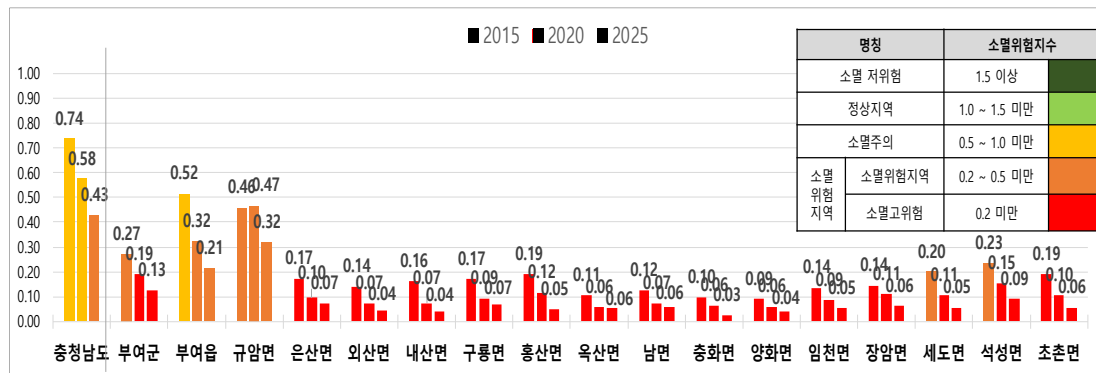
- 인구감소속도: 최근 5/10년간 인구감소폭이 심각한 마을(-10% 이상 지역)
- ※ 특별가중지수: 문화재보호지역, 친환경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2. 지역소멸 측정 결과

■ 부여군 읍면 대부분은 소멸고위험군에 해당

- 2025년 기준 부여군은 지역소멸지수는 0.13임. 이는 2015년 0.27, 2020년 0.19에 비해 낮은 수치임
- 2025년 기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 은산면(0.07), 외산면(0.04), 내산면(0.04), 구룡면(0.07), 홍산면(0.05), 옥산면(0.06), 남면(0.06), 충화면(0.03), 양화면(0.04), 임천면(0.05), 장암면(0.06), 세도면(0.05), 석성면(0.09), 초촌면(0.06)
- 2025년 기준 소멸위험지역(0.2-0.5): 부여읍(0.21), 규암면(0.32)

[그림 21] 부여군 지역소멸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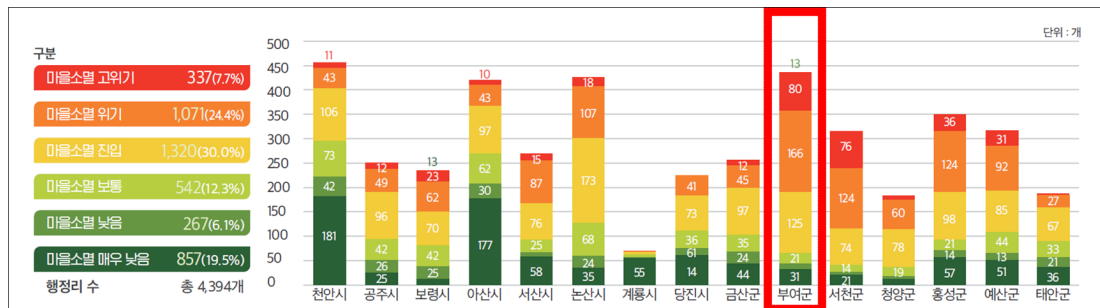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2025.07)

■ 마을소멸지수 기준, 부여군은 충남 내 소멸위험 마을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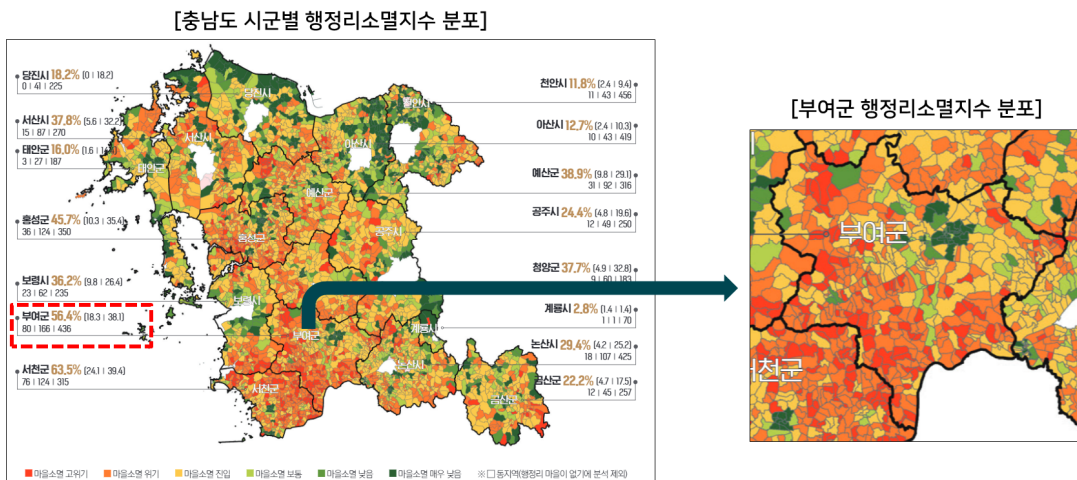
- 윤정미(2024)의 연구에 따르면, 부여군 마을소멸 고위기 80개 마을, 마을소멸 위기 166개 마을로 충남 내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서천군이 각각 76개 마을, 124개 마을로 나타남
- 전체 마을 중 소멸위기 마을 비중을 보면, 부여군은 56.4%로 서천군 63.5%에 이어 두 번째 차지

[그림 22] 충청남도 시군별 행정리 소멸지수 분석 결과



자료: 윤정미(2024),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p.3

[그림 23] 충청남도 및 부여군 행정리 소멸지수 분포 현황



자료: 윤정미(2024),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p.3

제3절 지역주민 인식 분석

1. 조사 개요

■ 조사 일시

- 2025년 9월 29일 오후 3시~5시
-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주민공청회 활용

■ 대상

-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주민공청회 참석자 80명
- 전체 설문 응답자는 90명. 이 중 10명의 응답지는 내용 미흡으로 제외

■ 조사 내용

- 응답자의 일반 사항
- 도시와 농촌 간 격차에 대한 의견
-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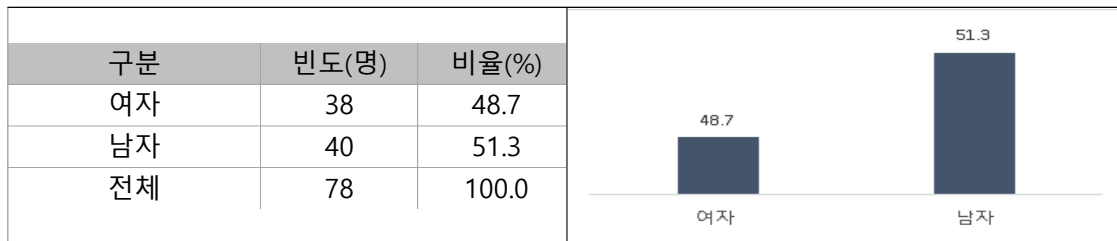
2. 조사 결과¹⁾

1) 응답자의 일반 사항

■ 성별

- 응답자 중 남자는 51.3%, 여자는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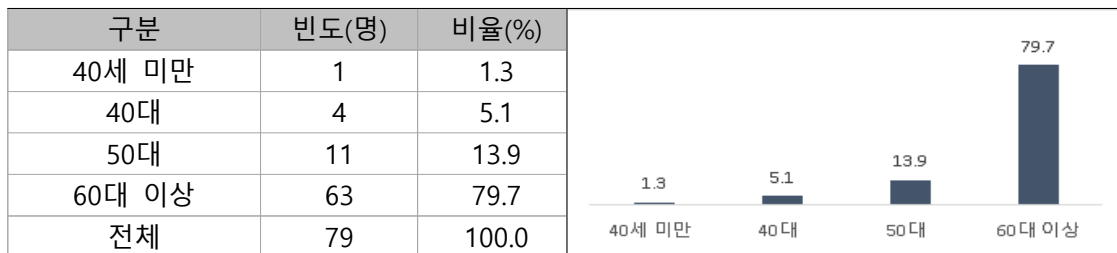
[표 5] 응답자 성별



■ 연령대

- 응답자 중 60대 이상이 7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50대는 13.9%, 40대 이하는 6.4% 차지

[표 6] 응답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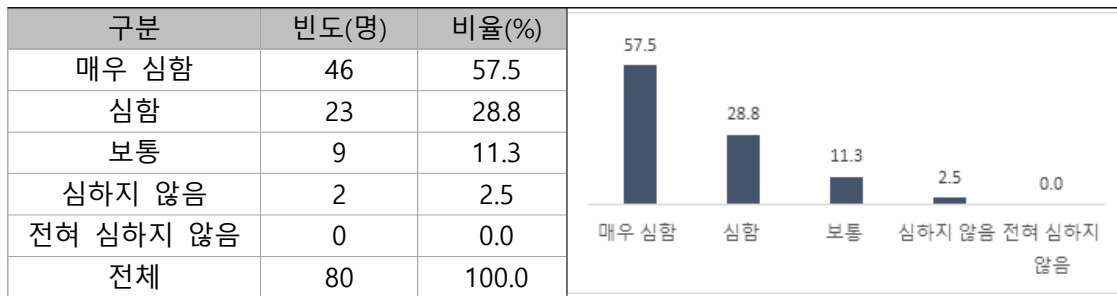
1) 설문조사 전체 결과는 부록2를 참고 바람

2) 도시와 농촌 간 격차에 대한 의견

■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인식 수준

-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57.5%는 ‘매우 심함’, 28.8%는 ‘심함’이라고 응답
-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6.3%는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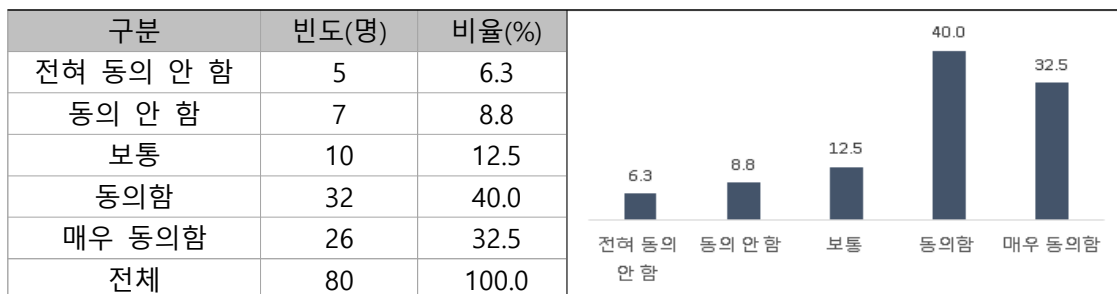
[표 7]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인식 수준



■ 농촌주민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 농촌주민 차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0%는 ‘동의함’, 32.5%는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
- 농촌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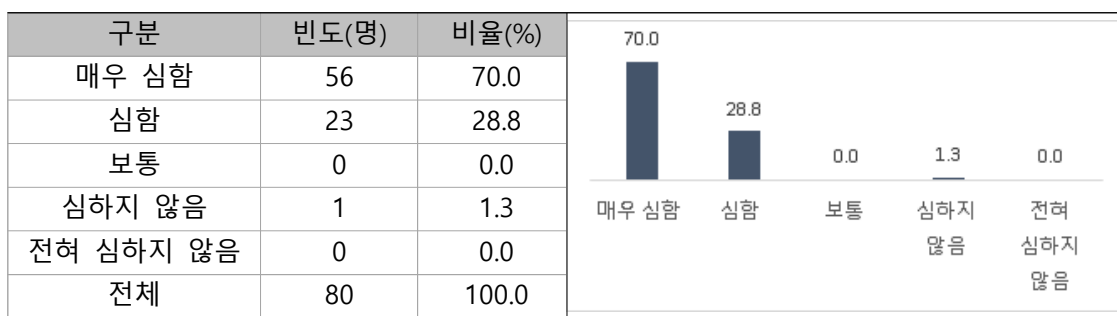
[표 8] 농촌주민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 부여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

- 부여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70.0%는 ‘매우 심함’이라고 응답했고, 28.8%는 ‘심함’으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98.8%는 부여군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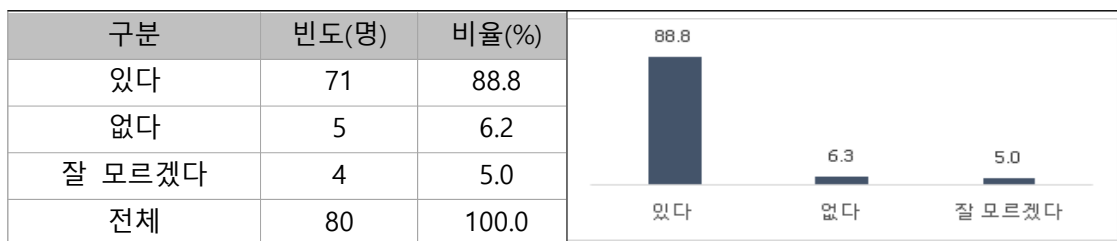
[표 9] 부여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



■ 인구 감소 시 마을 소멸 가능성 인식 여부

- 인구 감소 시 마을 소멸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88.8%는 ‘있다’고 응답함. 반면, ‘없다’는 응답자는 6.2%에 불과
- 부여군 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인구가 소멸한다면 마을 소멸이 현실화 될 것으로 인식

[표 10] 인구 감소 시 마을 소멸 가능성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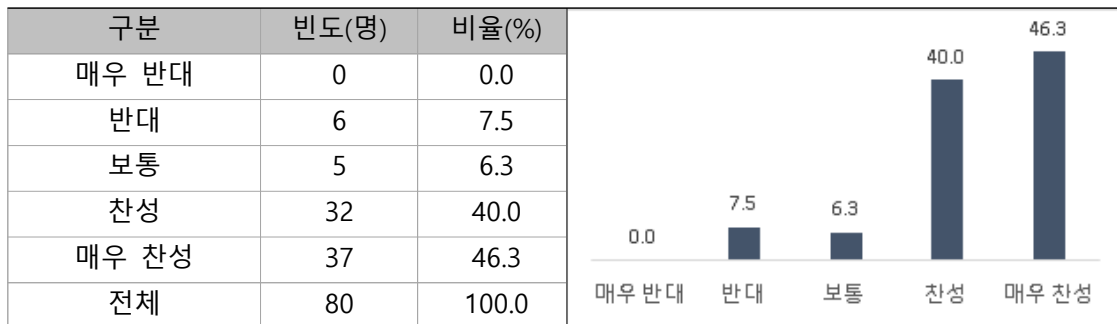


3)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한 태도

-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0.0%는 ‘찬성’, 46.3%는 ‘매우 찬성’으로 응답
- 전체적 응답자의 86.4%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함. 새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큼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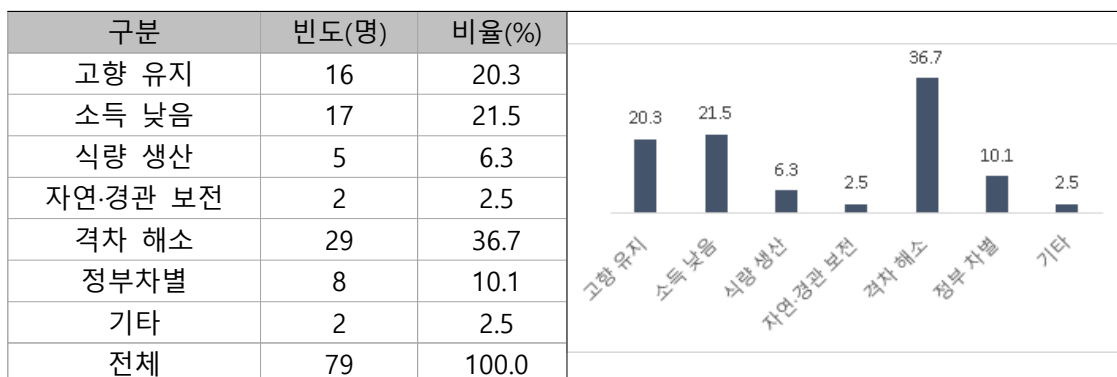
[표 11]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한 태도



■ 지급 찬성 이유

- 농촌기본소득 지급 찬성 이유를 보면, ‘격차 해소’가 3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낮은 소득’이 21.5%, ‘고향 유지’가 20.3% 순
- 전체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찬성 이유는 격차 해소와 낮은 소득, 그리고 고향의 유지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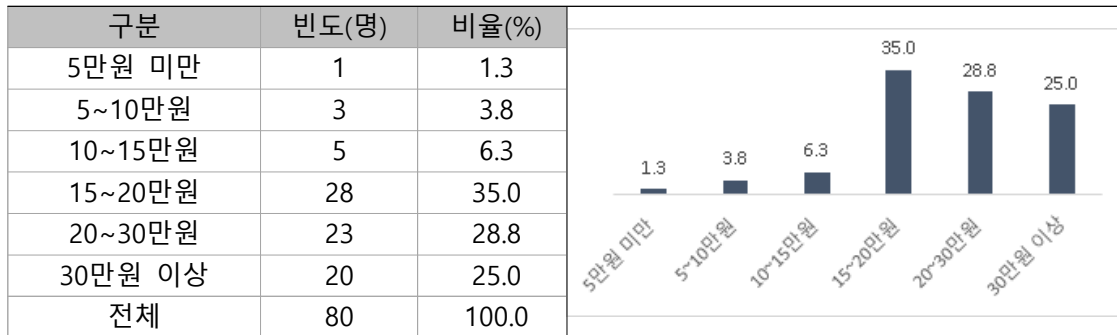
[표 12] 지급 찬성 이유(소득보전, 격차해소, 고향 유지 등)



■ 적정 월 지급액

- 농촌기본소득의 적정 월 지급액에 대한 의견으로는 ‘15~20만원’이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30만원’이 28.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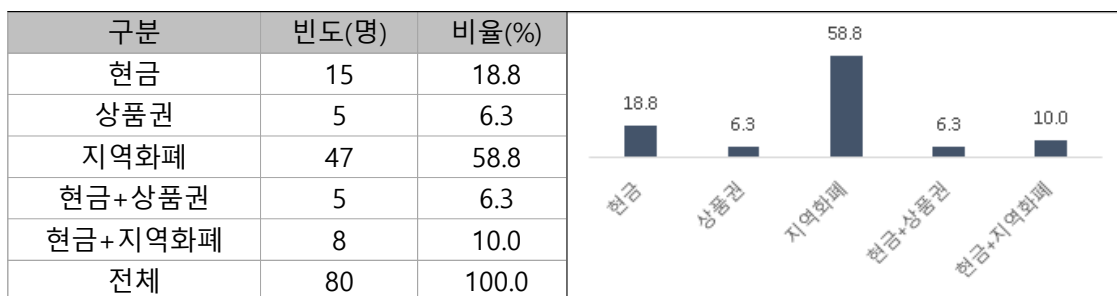
[표 13] 적정 월 지급액 수준



■ 선호하는 지급 형태

- 농촌기본소득의 선호하는 지급 형태에 대해 응답자의 58.8%는 ‘지역 화폐’라고 응답했고, 18.8%는 ‘현금’이라고 응답
-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것은 부여군의 지역화폐인 굿드래페이의 긍정적 효과인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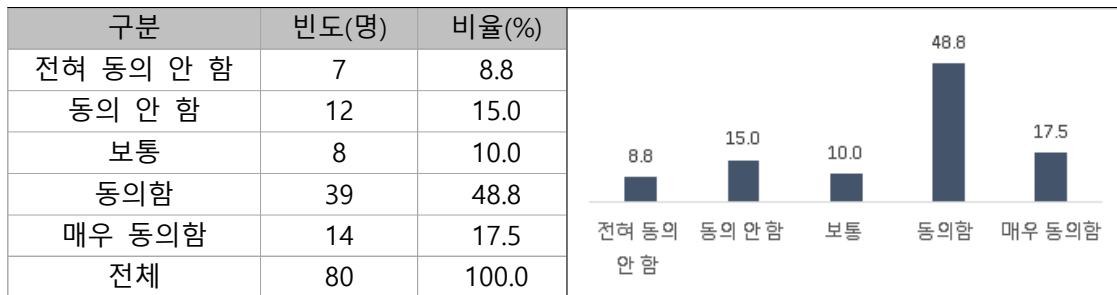
[표 14] 선호하는 지급 형태(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 중앙·도 지원이 없어도 부여군 자체 시행 필요성 동의 여부

-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이 없을 시 부여군 자체 시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8.8%는 ‘동의’했고, 17.5%는 ‘매우 동의’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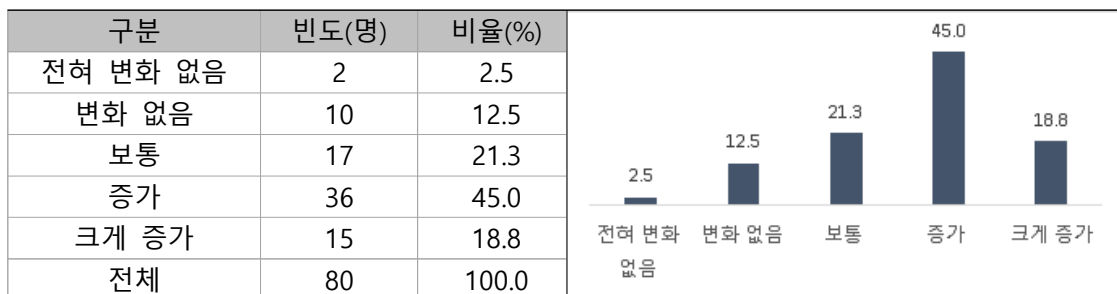
[표 15] 중앙·도 지원이 없어도 부여군 자체 시행 필요성 동의 여부



■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 인구 변화 전망

- 농촌기본소득으로 매월 15~20만원 지급 시 인구 변화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45.0%는 ‘증가’라고 응답했고, 18.8%는 ‘크게 증가’라고 응답
- 전체적으로 부여군에 농촌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지급된다면 인구감소는 완화 내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표 16] 15~20만원 지급 시 인구 변화 전망



IV.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정책모델 설계

제1절 대상 범위별 규모

제2절 지급 수준별 규모

제3절 지역특성 반영 사항

제4절 재정확보 방안

제1절 대상 범위별 규모

■ 부여군 인구수 및 인구 분포

- 부여군 전체인구 58,797명(2025.7)
- 부여군은 읍지역 인구가 30.1%, 면지역 인구가 69.9% 차지
- 부여읍권(규암면 포함) 거주 인구는 49.3%로 절반 차지
- 읍지역 인구: 17,685명(30.1%)
- 면지역 인구: 41,112명(69.9%)

■ 부여군 인구 과소지역 분포 현황

- 2,000명 이하 인구면: 6개/16개 읍면
- 3,000명 이하 인구면: 13개/16개 읍면

[표 17] 부여군 인구 분포 현황

행정기관	인 구 수		
	계	남	여
부여군	58,797	29,324	29,473
부여읍	17,685	8,757	8,928
규암면	11,326	5,576	5,750
은산면	3,515	1,775	1,740
외산면	2,142	1,059	1,083
내산면	1,436	729	707
구룡면	2,154	1,061	1,093
홍산면	2,540	1,243	1,297
옥산면	1,332	652	680
남면	1,711	831	880
충화면	1,049	554	495
양화면	1,544	744	800
임천면	2,577	1,274	1,303
장암면	2,451	1,238	1,213
세도면	2,846	1,467	1,379
석성면	2,584	1,380	1,204
초촌면	1,905	984	921

제2절 지급 수준별 규모

■ 부여군 전체 연간 기본소득 총액: 농식품부 시범사업 연계

- 지급대상: 부여군 모든 주민
- 지급액: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연계사업: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기초지자체 30% 부담)
- 부여군 전체 주민 대상 기본소득 총액: 약 1,058억 원, 그중 부여군 부담액 약 318억 원

[표 18] 부여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액 산정(정부 시범사업 기준)

구분	인구수 (명)	1인당 연간 기본소득 (만원)	총액(만원)	부여군 부담률	부여군 부담금(만원)
부여군	58,797	180	10,583,460	0.3	3,175,038
부여읍	17,685	180	3,183,300	0.3	954,990
규암면	11,326	180	2,038,680	0.3	611,604
은산면	3,515	180	632,700	0.3	189,810
외산면	2,142	180	385,560	0.3	115,668
내산면	1,436	180	258,480	0.3	77,544
구룡면	2,154	180	387,720	0.3	116,316
홍산면	2,540	180	457,200	0.3	137,160
옥산면	1,332	180	239,760	0.3	71,928
남 면	1,711	180	307,980	0.3	92,394
충화면	1,049	180	188,820	0.3	56,646
양화면	1,544	180	277,920	0.3	83,376
임천면	2,577	180	463,860	0.3	139,158
장암면	2,451	180	441,180	0.3	132,354
세도면	2,846	180	512,280	0.3	153,684
석성면	2,584	180	465,120	0.3	139,536
초촌면	1,905	180	342,900	0.3	102,870

■ 부여군 전체 연간 기본소득 총액: 부여군 자체 사업

- 지급대상: 부여군 모든 주민
- 지급액: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 사업형태: 부여군 자체 사업
- 부여군 전체 주민 대상 기본소득 총액: 약 3,527,820만 원

[표 19] 부여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액 산정(자체 사업)

구분	인구수 (명)	1인당 연간 기본소득(만원)	지급총액(만원)
부여군	58,797	60	3,527,820
부여읍	17,685	60	1,061,100
규암면	11,326	60	679,560
은산면	3,515	60	210,900
외산면	2,142	60	128,520
내산면	1,436	60	86,160
구룡면	2,154	60	129,240
홍산면	2,540	60	152,400
옥산면	1,332	60	79,920
남 면	1,711	60	102,660
충화면	1,049	60	62,940
양화면	1,544	60	92,640
임천면	2,577	60	154,620
장암면	2,451	60	147,060
세도면	2,846	60	170,760
석성면	2,584	60	155,040
초촌면	1,905	60	114,300

제3절 지급특성 반영 사항

1.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응 논리

■ 소멸위험 마을 수 충남 내 1위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핵심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인구감소 정도와 이에 대응한 노력임
- 윤정미(2024)의 연구에 따르면, 충남 내 마을소멸 위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천군이지만 마을소멸 위험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여군임
- 따라서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부여군은 인구소멸 면적이 충남 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광범위한 문화재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 발전 저해

-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고도(古都)이며 관내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릉원, 나성 등 다양한 역사유적지구가 있음
- 부여는 공주, 익산과 함께 지역 내 산재한 많은 백제 역사문화 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
-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이 많다는 것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긴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서 많은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부여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함
- 하지만 정부의 각종 개발 제한 사항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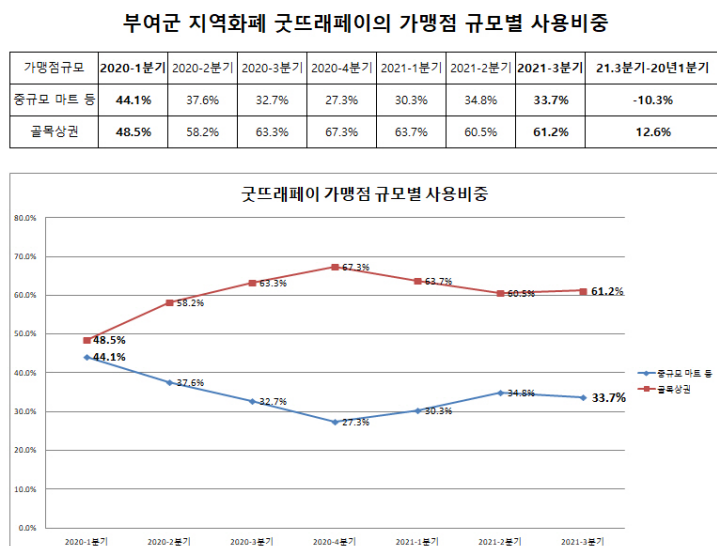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지구 및 생산량 충남 내 1위

- 부여군은 충청남도 내 지자체 중 농경지 면적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면적도 가장 많은 지역임
-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이 역사문화지구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농업 이외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부여군이 역사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도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주민 사용률 전국 최고 수준

-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주민 사용률은 95%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역화폐의 60% 이상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한 지역화폐 사용 시 부여군은 가장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4] 부여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가맹점 규모별 사용 비중



자료: 부여군청 내부자료

2. 부여군의 강한 의지

■ 부여군 자체 군민기본소득 실행

- 농식품부는 2028년부터 인구감소 심각지역인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부여군은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의 30%를 매칭하되, 만일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 군 자체적으로 월 5만 원,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사업 실시
-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부여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 혹은 본 사업 시행 시 청년들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부여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혹은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청년들에게는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에 대한 지원은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미래 지역의 생존을 결정하는 투자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굿뜨래페이 지불 방식 다양화(QR코드 등)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 농어촌기본소득의 중요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임. 본 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활성화가 가능함
- 하지만 지역화폐가 1회성 지불로 그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임
- 부여군은 지역화폐를 QR코드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

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따라서 부여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홍보 현황



자료: YTN 방송자료(좌), 굿뜨래페이 홈페이지(우)

■ 미수령자 원인 분석을 통해 수급률 제고

-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시 일부 미수령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농어촌기본소득 미수령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손해인 만큼 미수령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여군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기부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

- 농어촌기본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역 내 취약계층 등에게 기부를 원할 경우 이를 시스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 내 더 취약한 계층에게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연대경제 시스템을 마련

■ 부여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활동 적극 홍보

- 부여군의회 「부여군 농촌기본소득 정책연구회」 출범(대표의원 민병희)(2025.7.15.)
-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의 인구소멸 대응 ‘다시 숨 쉬는 마을’ 정책 제안(2025.7.16.)

- 부여군의회,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실시 방안」 정책 연구용역 착수 보고(2025.8.14.)
-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025.9.29.)

[그림 26]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추진 활동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정책
연구용역 착수(2025.8.14.)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위한 주민공청회(2025.9.29.)

■ 부여군의회, 농촌기본소득을 위한 결의안 채택 및 조례 제정

- 부여군의회는 10월 10일 노승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문)’을 채택
- 또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의결

[그림 27] 부여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문) 채택



자료: 굿모닝충청(2025.10.12.)

[표 20] 부여군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과 관계없이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생략)
제6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생략)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하 내용 생략(*부록 참조)	

제4절 재정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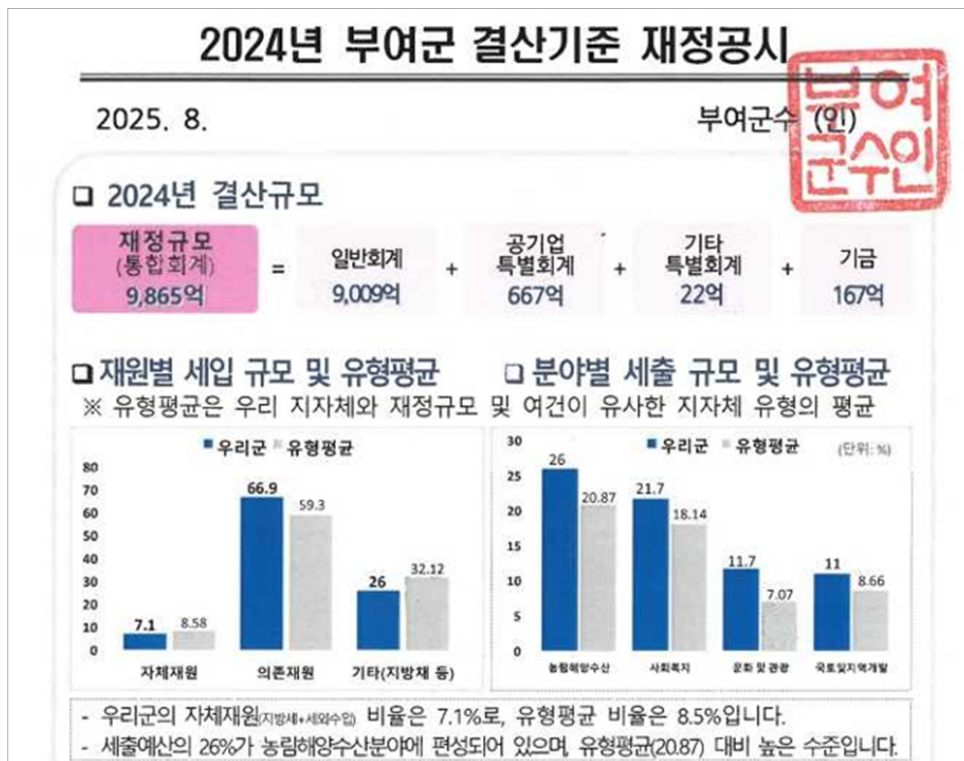
■ 국비

-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 활용(논의 중)

■ 지방비

- 순세계잉여금
- 자치단체장 재량사업비
- 타 예산 절감

[그림 28] 2024년 부여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추진 전략 및 로드맵

2. 실행체계

제1절 추진 전략 및 로드맵

1. 추진 전략

■ 전략1: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 부여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2026~27년
- 2년 후 군 재량으로 추가 지급: 청년 대상 월 5만 원 지급

■ 전략2: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2026년부터 군 자체 재원으로 월 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 2028년부터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본격 추진
- 2028년 본격 추진 시 청년 대상 5만 원 추가 지급

2. 로드맵

■ 1단계: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2026~27)

- 공모선정 시: 시범사업 추진
- 공모 미선정 시: 부여군 자체 사업 실시

■ 2단계: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실시(2028~)

- 농어촌기본소득 본 사업 실시
- 부여군 자체 재정으로 추가 지원: 청년 대상 5만 원 추가 지원

제2절 실행체계

■ 부여군

- 농촌기본소득 재정 마련
- 농촌기본소득 사업 집행
- 부여군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 농촌기본소득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

■ 부여군의회

- 농촌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농촌기본소득 예산안 심의·의결
- 농촌기본소득 사업 집행 관리·감독

■ 읍면사무소

- 농촌기본소득 대상자 파악 및 관리
- 농촌기본소득 지급

■ 유관 단체 (주민자치회, 이장단회, 시장상인회 등)

- 농촌기본소득 사업 안내 및 홍보
- 농촌기본소득 지급 관련 주민 홍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부여 굿뜨래페이 등

참고문헌

- 국정기획위원회. 2025.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자료.
- 국정기획위원회. 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박경철·강마야. 2015. 충남형 농촌주민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경철·한승석. 2019.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경철. 2019.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경철. 2021. 충청남도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방안 연구: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 부여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전남연구원. 재원동반 기본소득 모델의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 국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JNL이슈리포트. No.47. 2025.6.23

부록

1.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부여군 농촌기본소득(주민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부여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소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부여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부여군의회

2025.9

♣ 문의: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연구위원, 한규리 연구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73-26 Tel: 041-840-1206, E-mail: kcpark@cni.re.kr

※ 아래 질문에 대해 ○ 또는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도시와 농촌 간 격차에 대한 의견

- 귀하는 평소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한 편이다. ②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하지 않다. ⑤ 전혀 심하지 않다.
- 귀하는 농촌주민이 도시주민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 귀하는 부여군이 타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 귀하는 평소에 부여군이 타 지역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격차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교통 ② 의료·복지서비스 ③ 교육·문화 ④ 행정서비스
 ⑤ 생활환경(주거, 상업시설) ⑥ 소득·일자리 ⑦ 기타: _____

5. 귀하는 평소 부여군의 인구감소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한 편이다. ②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하지 않다. ⑤ 전혀 심하지 않다.

6. 귀하는 현재 부여군의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7. 귀하는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마을(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8. 귀하는 부여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①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② 생활·문화 여건 개선 ③ 주민소득 보장
④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⑤ 귀농·귀촌 확대 ⑥ 기타: _____

II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에 대한 의견

1. 귀하는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2. 귀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귀하는 농촌기본소득지급에 찬성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고향을 지키기 때문에 ② 소득이 낮기 때문에 ③ 식량(먹거리)을 생산하기 때문에
④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기 때문에 ⑤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⑥ 정부가 농촌을 차별해 왔기 때문에 ⑦ 기타: _____

4. 귀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한다면 매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미만 ③ 10만원~15만원 미만
④ 15만원~20만원 미만 ⑤ 20만원~30만원 미만 ⑥ 30만원 이상

5. 귀하는 정부가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어떤 지급 형태를 선호하시나요?
 ① 현금 ② 상품권 ③ 지역화폐(굿드래페이)
 ④ 현금+상품권 ⑤ 현금+지역화폐 ⑥ 기타
6. 귀하는 정부가 매월 15~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부여군 인구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①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증가할 것이다. ⑤ 크게 증가할 것이다.
7. 귀하는 정부가 매월 15~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부여군의 경제는 어떻게 변
 화될 것 같습니까?
 ①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발전할 것이다. ⑤ 매우 발전할 것이다.
8. 만일 중앙정부나 충남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부여군 자체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
 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9. 부여군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 및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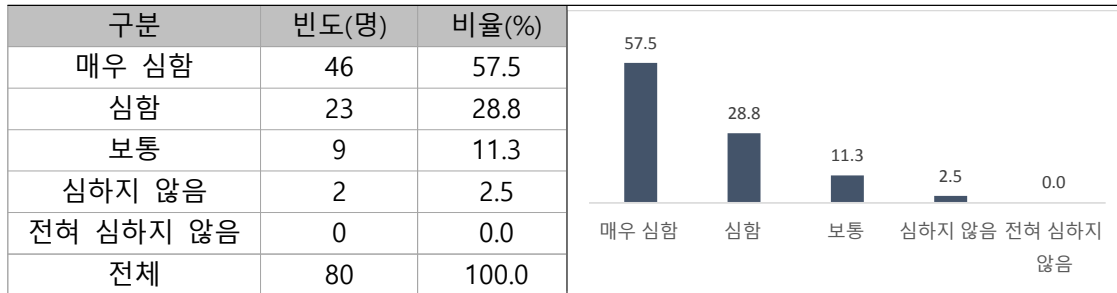
Ⅲ 응답자의 일반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40세 미만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주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림업 ② 비농림업
4.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① 면지역 ② 읍지역
5. 귀하의 연락처는? ()(*선택 사항으로 연구에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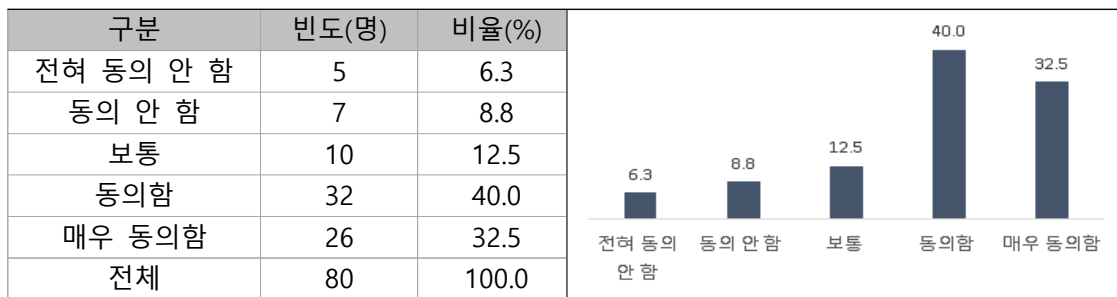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부여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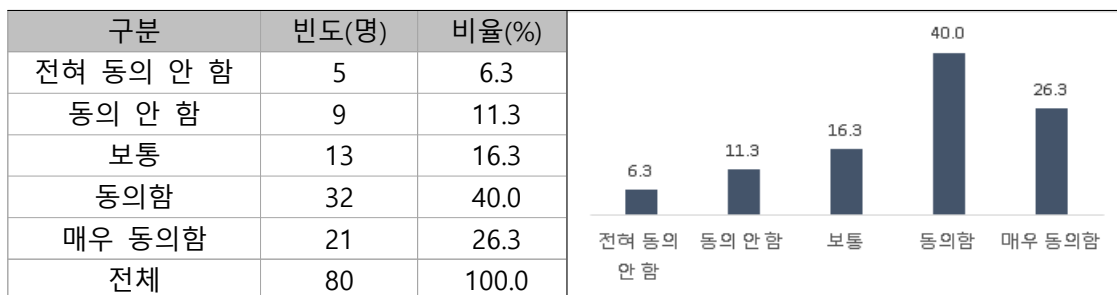
[표 1]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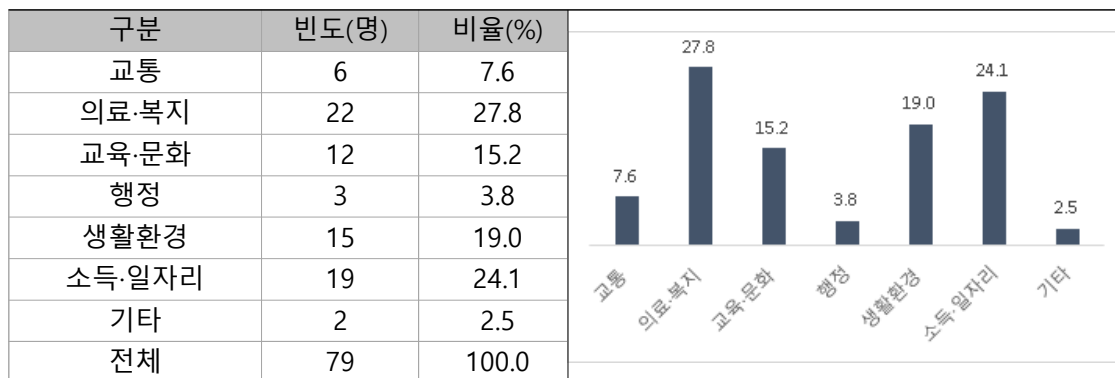
[표 2] 농촌주민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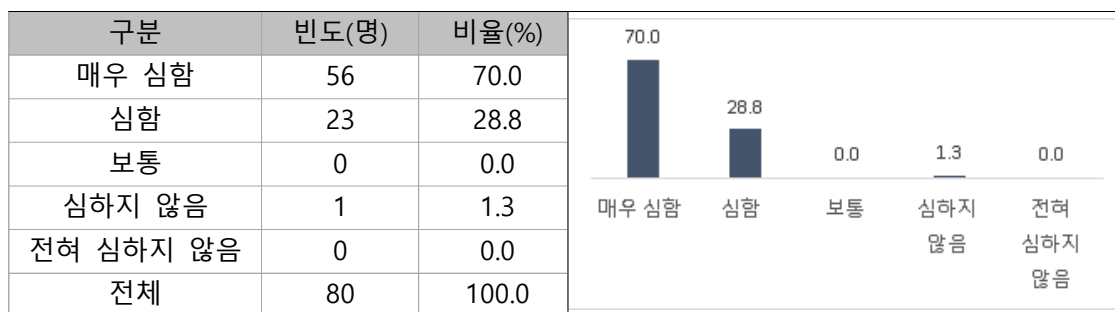
[표 3] 부여군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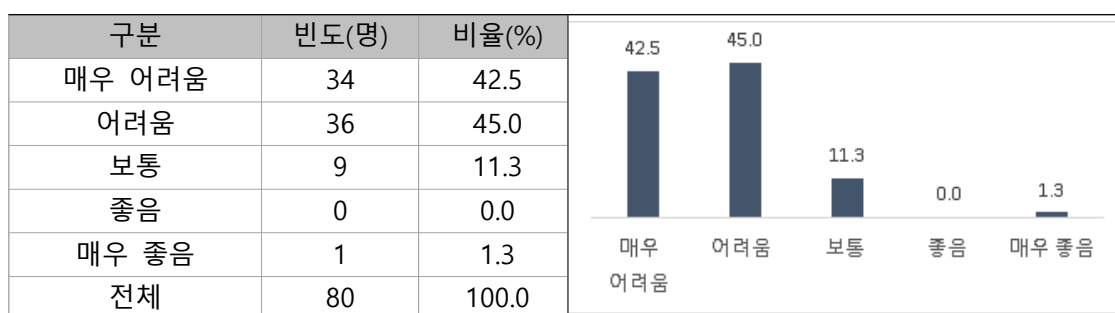
[표 4] 부여군이 격차가 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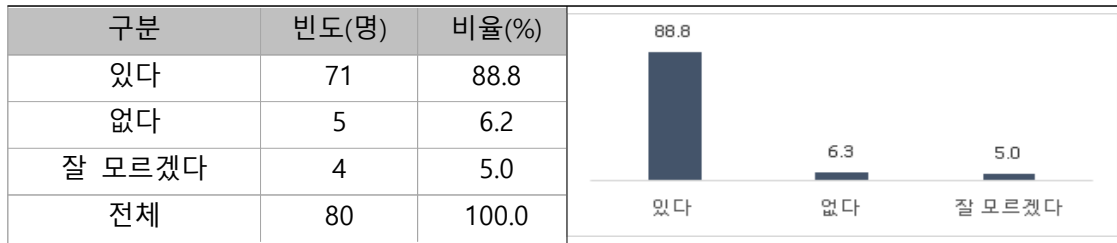
[표 5] 부여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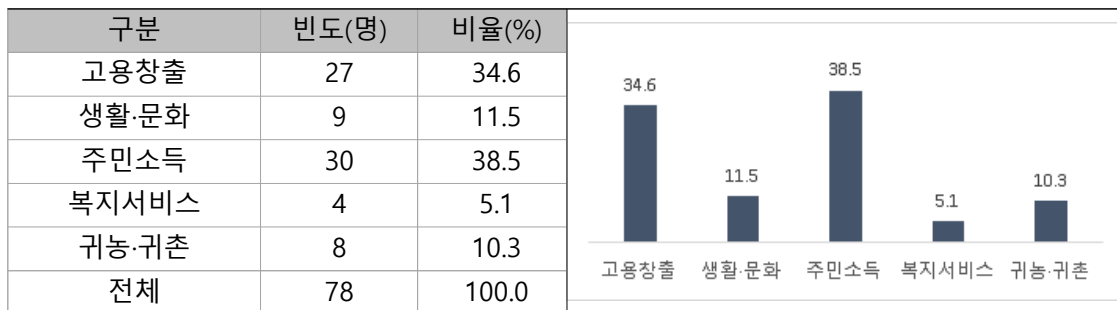
[표 6] 부여군 경제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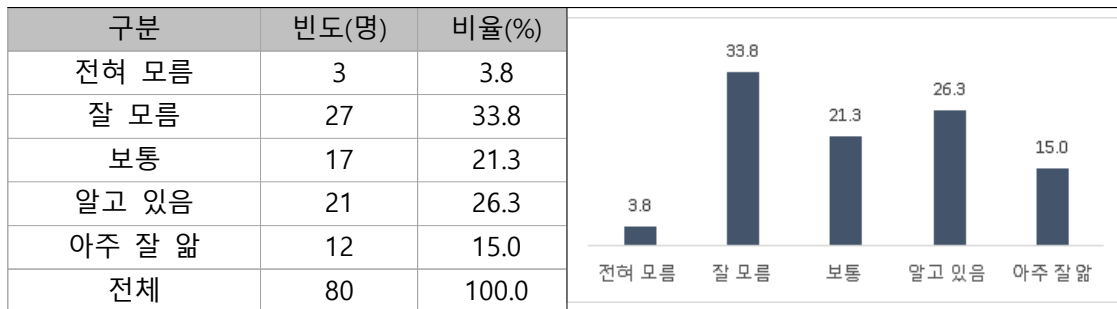
[표 7] 인구 감소 시 마을 소멸 가능성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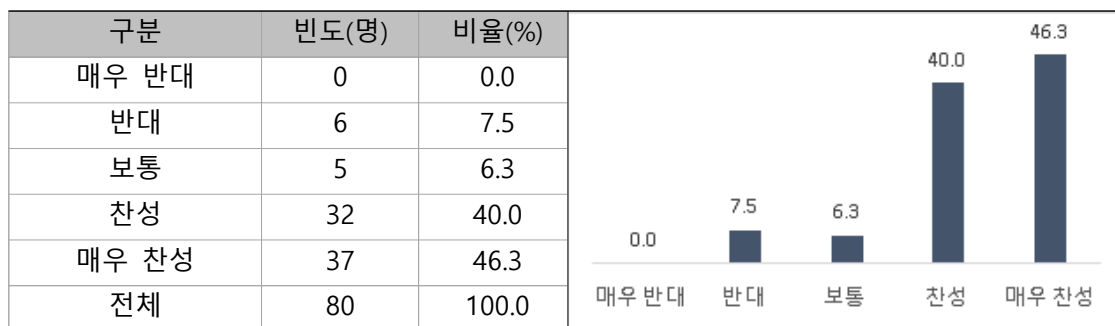
[표 8] 인구 감소 해결에 효과적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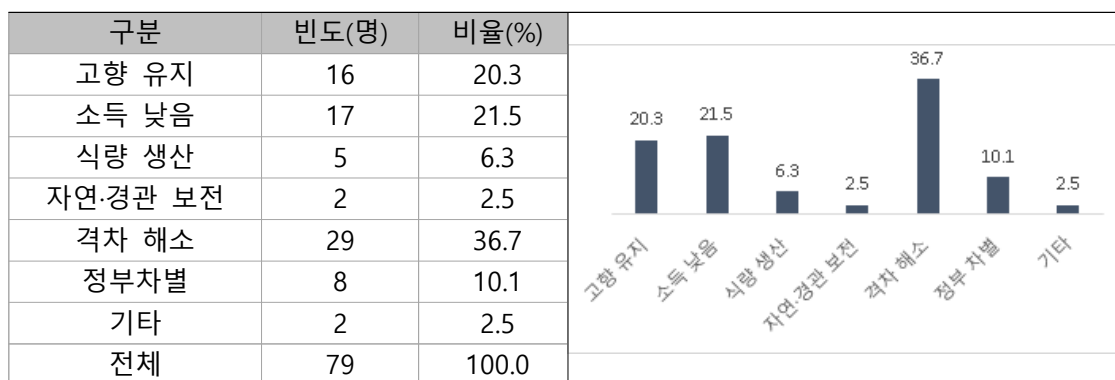
[표 9]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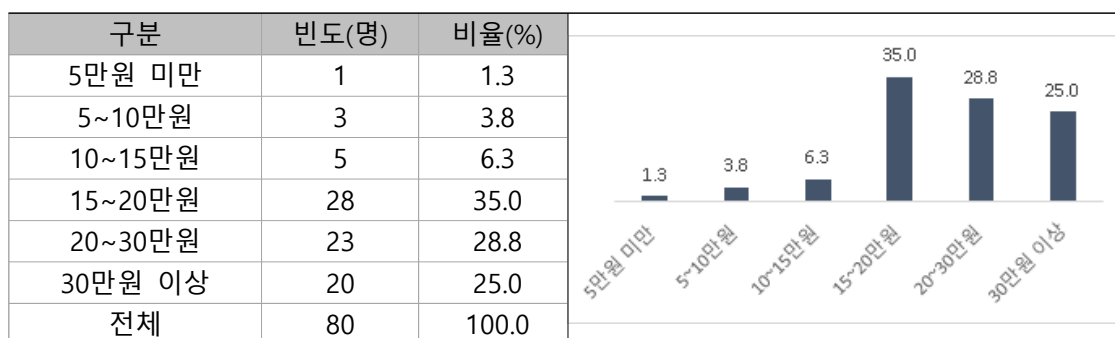
[표 10]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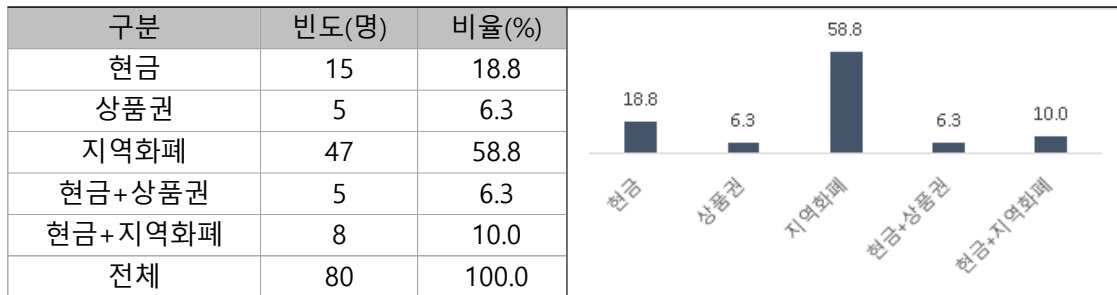
[표 11] 지급 찬성 이유(소득보전, 격차해소, 고향 유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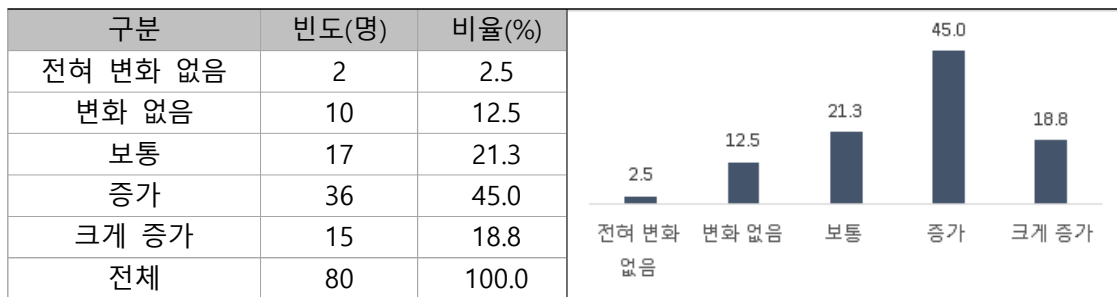
[표 12] 적정 월 지급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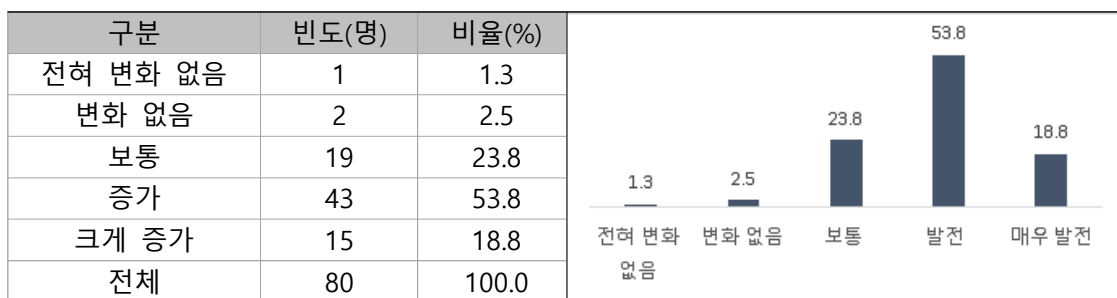
[표 13] 선호하는 지급 형태(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표 14] 15~20만원 지급 시 인구 변화 전망



[표 15] 15~20만원 지급 시 경제 변화 전망



[표 16] 중앙·도 지원이 없어도 부여군 자체 시행 필요성 동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 안 함	7	8.8	
동의 안 함	12	15.0	
보통	8	10.0	
동의함	39	48.8	
매우 동의함	14	17.5	
전체	80	100.0	

[표 17]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자유 의견·제안

구분	빈도(명)	비율(%)	
기본소득 실현 필요	3	23.1	
국비 or 로비지원 상향	1	7.7	
기업 유치 기원	1	7.7	
지역화폐로 줘야 함	1	7.7	
농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	1	7.7	
각박한 농촌생활에 꿈을 잃지 않을 것	1	7.7	
심한 도농격차와 농촌거주 희망하는 청년이 없어 대책 필요	1	7.7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귀촌이 수월해질 것	1	7.7	
지역소멸 위기로 특단의 대책 강구	1	7.7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 필요	1	7.7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좋겠음	1	7.7	
전체	13	100.0	

[표 18]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여자	38	48.7	
남자	40	51.3	
전체	78	100.0	

[표 19] 연령대

구분	빈도(명)	비율(%)	
40세 미만	1	1.3	
40대	4	5.1	
50대	11	13.9	
60대 이상	63	79.7	
전체	79	100.0	

[표 20] 주요 직업

구분	빈도(명)	비율(%)	
농림업	50	64.9	
비농림업	27	35.1	
전체	77	100.0	

[표 21] 거주지

구분	빈도(명)	비율(%)	
면지역	63	79.7	
읍지역	16	20.3	
전체	79	100.0	

3. 부여군 기본소득 조례안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

(2025.10.10. 심의·의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과 관계없이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4. 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군민 인식제고 방안

6.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예산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 경제담당 부서장, 농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여군의회 의원 1인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박경철 연구위원 총괄

☐ 내부 연구진

김용현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한규리 연구원 연구 간사

목소리 연구원